



Fitch,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(Fitch Ratings)는 5월 22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국, 중국과 같은 수준인 'AA'에서 'A+'로 두 단계 강등한다고 밝힘.

- 신용등급 강등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높은 공공부채 비율 때문이며, 국가채무 규모가 1,000조 엔 (GDP대비 239%)에 달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.¹⁾
 - 이는 일본의 장기 침체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데다 고령화로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,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임.
 -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국가부채비율은 1990년 70%에서 2000년 140%, 2011년 212%로 상승하였음.
- 이에 집권당인 민주당(노다 요시히코 총리)은 지난해 12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법안²⁾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의 미온한 태도로 진척시키지는 못했음.
 - 지난해 일본의 세수(稅收)는 41조 엔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1990년 60조 엔에 비해 1/3 이상이 줄어든 수준으로,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임.

■ 이번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연초부터 예견된 일이고 정부의 채무가 대부분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침착한 기조를 유지함.

- 노다 총리는 이번 등급 강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후루카와 모토히사(古川元久) 경제재무상은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임.

1) 약 1,000조 엔에 달하는 국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연간 22조 엔으로 정부 예산의 약 25%를 차지하고 있음.

2) 노다 총리는 소비세율을 현행 5%에서 2014년 4월 8%로 인상하고, 2015년에는 10%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,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반대와 여당 내에서도 시행에 대한 반대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S&P와 무디스의 추가 강등이 예견되고 있음.

- 이런 일본의 반응은 일본 국채의 90% 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신용등급 등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, 국채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채권국이기 때문임.³⁾

■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가령 인상이 되더라도 2020년 기초재정수지(primary balance)가 흑자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기는 힘든 상황임.

- 특히,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, 단기간에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 -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엔화의 안전자산 선호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어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여건의 개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, 일본 신용등급 강등의 후폭풍은 앞으로 일본이 해결해야 할 난제인 것으로 판단됨.

(일본 및 국내 주요 뉴스 외, 5/23)

3) 2011년 말 일본의 순수 외환보유액은 253조 엔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남.